주·야간보호센터 061)394-0123
신세계요양원
061-395-2580 장성읍 방울샘길 12 (장성읍 영천리 1493-5)

호 남 신 문

호남신문 자매지
국민복지신문
2010년 8월 30일 창간

(대표전화) 062-229-6000 1946년 10월 26일 창간 i-honam.com 제 3393호 (음력 7월 27일) 2022년 8월 24일 수요일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다주택자가 3억 이하 지방주택 21만채 3년간 싹쓸이"

김회재 의원, 국토교통부 자료 분석…33조6194억 달하는 물량

3년 새 2건 이상 구매자 7만명↑…세 감면시 투기세력 먹잇감

지난 3년여 동안 다주택자 7만8000여 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21만여 건을 싹쓸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혜택으로 지방의 저가주택이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 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다주택자 7만8459명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 21만1389가구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으로만 33조 6194억원에 달하는 물량이다.

시기별로는 2019년 5만773건(8조1195억원), 2020년 6만6304건(11조5334억원), 2021년 6만8904건(10조3404억 원), 2022년 상반기 2만5408건(3조6260억원) 등이다.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 건수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원)으로 가장 많고 50대 5만5601건(8조1393억원), 60대 이상 44598건(6조3330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20대 이하의 구매 건수도 8882건(1조3531억원)에 달해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한 자금조달로 김 의원 측은 추정했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 같은 지방 저가주택 쓸어담기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잇감으로 만들게 될 것이다"며 "외지 투기세력이 저가주택을 사들여 집값을 올린 뒤 내놓은다면 결국 피해는 지방의 실수요자 되기 때문에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승호 기자

가을의 향연 '수크령' 절기상 '처서'인 23일 오전 울산 남구 삼호교 인근에 가을의 전령사 수크령이 활짝 펴 있다.

장성 평림댐도 '가뭄 심각' 진입…경북 운문댐 이어 두 번째

남부지방 가뭄 심화…강수량 예년 57%

용수 대체 공급…담양·장성 물 절약 독려

남부지방의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전남 장성군 영산강수계의 평림댐이 가뭄 '심각' 단계에 진입했다.

환경부는 지난 21일을 기점으로 평림댐의 가뭄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월1일부터 22일 오전 7시까지 평림댐 유역에 내린 비는 544㎜로, 이는 예년 대비 57%에 불과하다. 평림댐은 지난 6월19일 가뭄 '관심' 단계에 진입했다. 7월2일 '주의' 단계로 격상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가뭄단계인 남부지방 댐 11곳 중 '심각' 단계로 관리하는 댐은 경북 청도의 운문댐을 포함해 2개로 늘었다. 환경부는 가뭄 '주의' 단계부터 하천유지용수 전량 감량했다. 농업용수는 탄력적으로 감량해 현재 농업용수의 50%를 감량해 공급하고 있다.

'관심' 단계부터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해 인근 농업용 저수지인 장성호, 수양제와 연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평림댐의 용수 일 최대 1.5만톤을 대체 공급하고 있다. 현재 평림댐에서 담양군과 장성군에 공급해야 하는 생활·공업용수 일 2.38만톤은 공급되고 있다.

환경부는 평림댐의 가뭄상황이 더 심화될 경우에 대비해 담양군, 장성군 등을 대상으로 물 절약을 독려하고 있다. 물 사용량을 줄인 지자체에 수도 요금을 지원하는 '자율절수 수요조정제도'에 해당 지자체가 적극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장성=김수권 기자

'전국 꼴찌 광주 학교급식' 추경예산도 찔끔 인상…2학기 급식 차질 불가피

광주교사노조 "영양교사 대부분 예산 부족 지적"

광주지역 학교 급식지원비가 전국 꼴찌 수준인 가운데 추경예산안 인상액도 개인당 200원에 불과해 2학기 급식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추경예산을 통해 500억원이 사립학교 시설관련 예산으로 배정됐으며 교육감 인수위원으로 활동했던 학교에는 31억원이 지원돼 형평성 문제까지 지적됐다.

23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이틀동안 초·중·고·특수학교 영양교사 245명을 대상으로 '시교육청의 급식비 추경예산 7.4% 인상(개인당 200원)'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예산이 부족으로 급식 정상운영 불가'가 85.7%로 나타났다.

적정 인상액은 1000원 이상이 30%(73명)이며, 나머지는 20% 이상 인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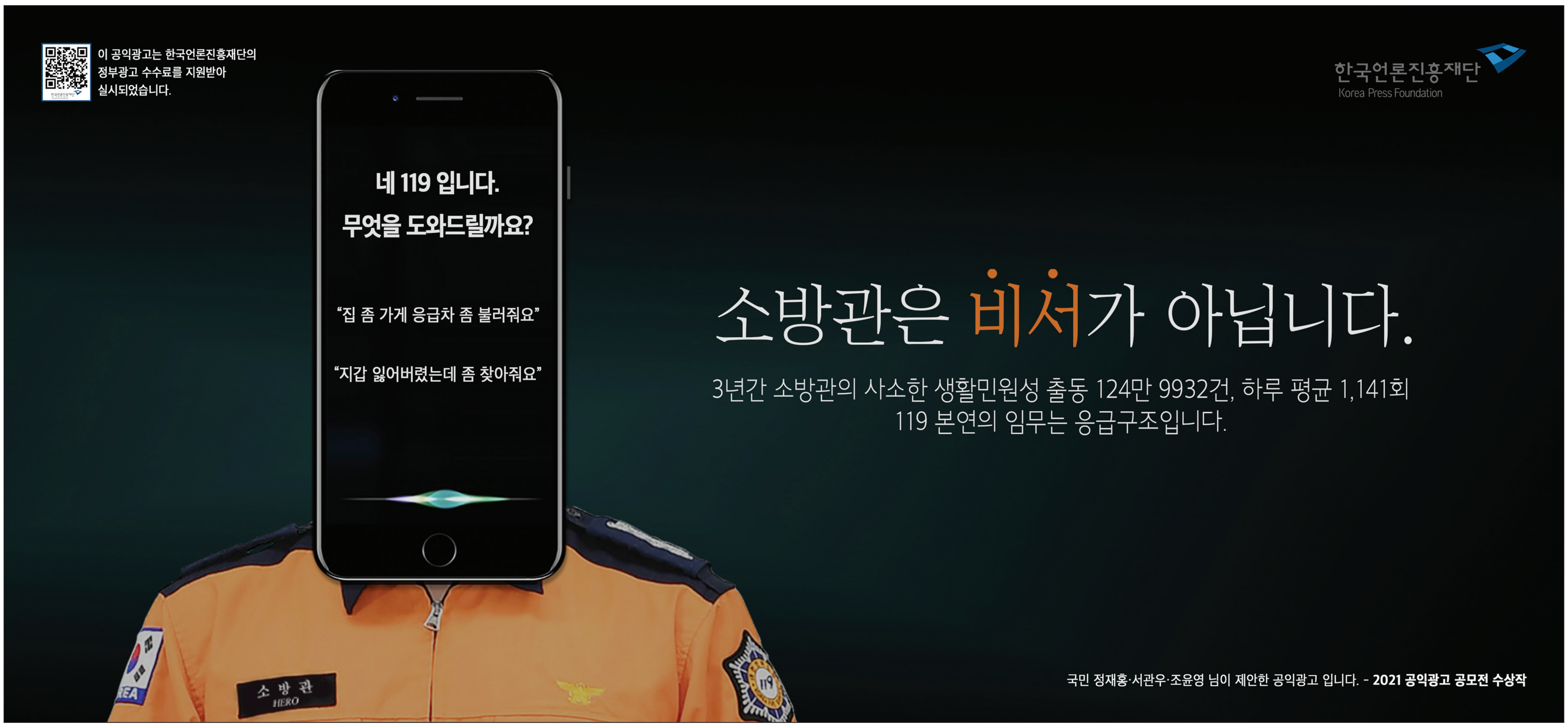
1학기 학교급식비에 대한 질문에는 81.6%가 초과 사용했으며 나머지 18.4% 응답자도 식재료를 조정해 단가에 맞추는 식으로 급식실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교사노조 관계자는 "시교육청은 추경예산을 통해 학교급식비 14억원(7.4%)을 인상했지만 식자재 상승비율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며 "2학기 학교

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학교의 영양사와 영양교사들의 경고를 새겨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광주교사노조는 학교급식비 인상에 비해 사립학교 지원예산은 커졌다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사노조는 "이번 추경예산 총액은 6250억원이며 이중 500억원이 사립학교시설관련 예산으로 배정됐으며 교육감 직인수위원회에 참여한 모 교장의 학교법인에는 급식비 인상액 보다 많은 31억원이 배정됐다"며 "광주시의회는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 제출안을 수정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광주지역 학교급식 단가는 초등 2029원, 중등 2525원, 고등 2603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17개 시·도 중 최하위이다.

김재환 기자